

식민지 ‘지역언론’에서 ‘제국언론’으로 —신문체제와 지면을 통해 본 『조선시보』의 특징과 의미—

전성현* · 이가연** · 배병욱*** · 하지영****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선시보의 창간과 회사 조직의 변화
- III. ‘지역언론’으로의 시작
- IV. 식민지 ‘전조선언론’으로의 도약
- V. ‘제국언론’으로의 확장
- VI. 맺음말

| 국문초록 |

개항 이후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에 의해 이른 시기 창간된 『조선시보』는 당초 부산의 일본인사회를 대변하는 지역 상업신문으로 창간되었다. 그리고 조선이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체제가 심화되자 식민지 전조선의 신문으로 성장하고자 했다. 나아가 제국언론으로 확장하고자 신문지사·지국의 확대는 물론 지면 구성도 제국과 식민지 전체를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현재 확인 가능한

* 제1저자,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사학과 교수 / socequ21@dau.ac.kr

** 공동저자, 동아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 diet43@hanmail.net

*** 공동저자,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bbw0716@hanmail.net

**** 공동저자,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특별연구원 / haji518@hanmail.net

1914년부터 1941년까지의 신문체제의 변화와 지면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을 위한 지역신문인 『조선시보』는 지면 구성과 게재 기사를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을 대변하는 신문이었기에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역주의의 경계를 넘나 들었다. 즉,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입장에서 조선총독부를 대변하기도 했지만 지역주의의 입장에서 총독정치의 미흡한 점을 언급하거나 성토했기도 했고, 일본 본국의 정당정치와 식민정책에 대해 과감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둘째, 다른 일본인 지역신문인 『부산일보』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지역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으며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신문이었다. 특히 식민자 측면에서는 ‘부민의 여론’과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회 상층은 물론 중산층 이하의 여론까지 대변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식민자 측의 동향에도 매우 촉각이 예민하여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조선인사회에 대해서도 당대 주요 한글신문에 보도된 내용보다 상세히 보도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자주 게재했다.

다만 『조선시보』가 강조하는 ‘부민’, ‘여론’, ‘공공성’에는 사회 하층의 절대 다수인 조선인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들이 조성한 ‘여론’과 ‘공론’에 조선인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동원했지만 일상에서는 차별과 배제라는 식민자의 시선으로 일관했다. 그렇기에 중앙지에 비해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모욕적 기사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보』는 식민성, 지역성, 계층성, 민족성이 한데 얽혀 복잡하고 독특한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언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조선시보, 부산일보, 일문신문, 지역언론, 전조선언론, 제국언론, ‘재조일본인’, 식민자, 일본인사회

I. 머리말

한국의 근대언론사는 그동안 민족운동사의 일환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언론사는 대체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언론의 저항을 강조하며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식민통치하의 언론은 제

국일본이나 조선총독부와 통치상의 관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즉, 식민권력은 언론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식민지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식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따라서 식민권력은 언론에 대해 민감했고 지속적인 검열과 통제정책으로 일관했다.¹⁾ 그 과정에서 언론은 식민권력에 저항하기도 했지만 검열과 통제를 자기 내면화하여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동화되기도 했다. 나아가 식민권력의 물리적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유착되어 집권 세력의 정책을 선전하는 나팔수 역할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해되어 온 한국 근대언론사는 일제강점기 언론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 저항의 민족지와 협력의 친일지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협력과 저항, 그리고 자기 검열과 통제를 한 몸으로 체현한 식민지 근대언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민족적인 측면에서 조선인 언론에만 집중하고 일본인 언론을 제외함으로써 식민지체제가 지닌 다양성과 다층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양 언론의 민족적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체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 민족적 구분을 넘어서는 '경계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른

1)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화연구소,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정근식 외, 『검열의 계국 -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2) 홍순권, 「일제시기 신문사 연구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 『석당논총』 52, 2012. 여기서는 주로 통사를 통한 연구 성과만을 제시했는데 그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최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60.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0; 『인물 한국언론사』, 나남, 1995. 김민환, 『한국언론사』, 나남, 1996.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 일본의 침략과 열강세력의 언론통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한원영, 『한국신문사』, 푸른사상사, 2008. 김민환, 『한국언론사』, 나남, 2010(개정2판).

바 ‘회색지대’, ‘경계지대’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 식민지 조선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국일본 또는 식민권력의 동태나 향방 등 식민지체제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오히려 일본인 언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일본인 언론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을 위한 언론이었지만 그 확장과 이용의 측면에서 조선인들을 적극 끌어들이거나 반대로 조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식민지체제를 민족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제국적, 지역적, 계급적, 계층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단순히 민족적 구별에 따라, 그리고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집착하여 일본인 언론을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식민지체제와 지역사회의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들 일본인 언론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조선에 정착 이주한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은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사회를 구축하고 그 대변지로서 일문신문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언론활동을 전개했다. 그 신문만도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전 시기를 거쳐 21종에 이르렀다. 일본인 중심의 도시 대부분에서 발간된 일문지는 1941년 전시체제하 ‘一道一紙制’에 의해 신문 통·폐합이 실시되면서 해방되기 전까지 총 12종만이 남았다. 그 가운데 현존하는 일문신문은 『京城日報』, 『朝鮮新聞』, 『釜山日報』, 『朝鮮時報』뿐이다.³⁾ 이 가운데 경성에서 발간된 『경성일보』와 『조선신문』⁴⁾은 중앙지로서 지방신문이 아니기에 실제 식민정책의 바로미터라

3) 한시적이거나 신문절발의 형태로 존재하는 신문은 많지만 긴 시간을 이어가며 현존하는 신문은 위 4종밖에 없다.

4) 인천에서 창간된 『조선신보』는 1919년까지 지방신문이었으나 이후 본사를 경성으로 옮기면서 중앙지로 전환했다.

고 할 수 있는 식민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지방신문은 『부산일보』와 『조선시보』가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식민지 조선내의 일본인 언론에 대한 연구는 한국학계에서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또는 조선인 발행 민간지에 비하면 대단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나마 경성일보가 주축이며, 『부산일보』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행본이 최근에 나온 것을 제외하면, 조선신문에 관한 논문과 『조선신문』의 전신인 『조선신보』를 광고만으로 살펴본 단행본이 나온 정도이다.⁵⁾ 또한 일본 학계에서도 주로 『경성일보』와 『매일신보』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어,⁶⁾ 기타 지방지의 연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 언론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소외된 데는 민족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 등도 중요한 이유였다. 또한 한국학계의 일본인 언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았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인 언론의 성격을 단순히 ‘식민언론’으로 선형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식민지에서 뿌리를 내렸던 ‘지역언론’ 또는 ‘제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5) 채백, 『朝鮮新報에 관한 一研究』, 『韓國言論學報』 26, 1991. 김대환, 『사이토총독의 문화정치와 <경성일보>』, 『논문집』 17, 2004. 정신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선북스, 2005. 김태현, 『광복 이전 일본인 경영 신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전성근, 『<지배 이데올로기>의 선택과 배제에 관한 고찰 - 시대일보와 경성일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9, 2006. 미즈노 나오키,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일본어 신문』, 『역사문제연구』 18, 2007. 장신, 『한말 일제초 재인천 일본인의 신문 발행과 조선신문』, 『인천학연구』 6, 2007. 심원섭, 『아베 미츠이에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39, 2009. 홍순권·전성현 엮음, 『일제시기 일본인의 부산일보 경영』, 세종출판사, 2013. 이승원, 『조선신보, 제국과 식민의 교차로』, 보고사, 2016.
- 6) 柴崎力榮, 『徳富蘇峰と京城日報』, 『日本歴史』 425, 1983. 森山茂徳, 『現地新聞と總督政治 - 京城日報について』, 『近代日本と植民地』 7, 岩波書店, 1993. 이상철, 『朝鮮における日本人經營新聞の歴史』, 角川學藝出版, 2009. 김태현, 『朝鮮における在留日本人社會と日本人經營新聞』, 神戸大 博士論文, 2011.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언론활동은 생각보다 더 활발했고, 그것이 식민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다. 개항 이후 조선으로 건너와 일찍부터 일본인사회를 건설한 일본인들은 초기부터 개항장을 비롯한 조선의 각 도시에서 일본어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들 일본인 신문은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 등 식민통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 총독부의 언론정책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지역주의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일본인 신문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한국 및 동아시아 근대와 식민지 정책연구의 활성화 및 지역·지방사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제강점기 조선의 한 지방신문인 『조선시보』의 체제와 지면내용을 중심으로 그 실체의 일단을 보여주고자 한다.

II. 『조선시보』의 창간과 회사 조직의 변화

『조선시보』의 기원은 189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⁷⁾ 개항 이후 부산으로 넘어온 대륙낭인들은 부산에 그들의 사랑방 ‘양산박’을 두고 여기서 『釜山商況』을 창간하였다. 이 신문은 이름 그대로 부산의 ‘商況’을 보도하던 부정기신문이었는데, 1894년 7월 『東亞貿易新聞』으로 개제 후 경영곤란으로 곧 휴간하였다. 1894년 11월 21일 『九州日日新聞』의 종군기자로 청일전쟁 취재 차 조선에 와 있던 구마모토 국권당의 아다

7) 『新聞總覽』(大正六年)에는 1892년 2월에 첫 호가 나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日本電報通信社, 『新聞總覽』, 1917, 780쪽) 이후 신문총람에서는 모두 1892년 7월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어 이에 따른다.

치 겐쵸(安達謙藏)가 이를 인수하고 그 지령을 계승하여 신문을 발행하니, 곧 『조선시보』의 시작이었다. 총 6면의 일간지로 일어뿐 아니라 한글 기사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제말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된 이 시기 신문들 중에서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조선시보』의 창간은 당시 부산총영사 무로타 요시후미(室田美文)의 권유와 부산상업회의소 회두 사카키바라 시게오(榊原茂夫)의 경제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창간자금 400엔으로 이와타테인쇄회사(岩立印刷會社)를 매수하여 인쇄기계와 활자를 확보하였으며, 사옥은 입강정에 두고, 기자 및 직공은 우노 시치로(宇野七郎), 오바타 히데오(大畑秀夫), 기쿠치 겐쵸(菊池謙讓) 등 『구주일일신문』의 인력들을 구마모토로부터 불러들여 충원했다. 창간 후 아다치는 곧 한성으로 가 『漢城新報』를 발행하고 사장 겸 주필로 활동했으므로, 초대사장은 역시 구마모토 국권당원이자 『구주일일신문』기자 출신의 다카키 스에쿠마(高木末熊)가 맡았다. 이렇듯 『조선시보』는 구마모토 국권당과 그 기관지 『구주일일신문』 계열에 의해 창간되어 운영되었고, 다른 지역 사람은 주필 등 간부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역색이 강했다. 따라서 『조선시보』의 창간 광고가 『구주일일신문』에 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⁸⁾ 더군다나 국권당의 낭인들은 을미사변의 가해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니, 부산총영사가 제안하고 아다치가 창간을 주도한 이 신문이 조선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세력 확대라는 재조일본인들의 욕망을 담는 매체로 기능하였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카키가 사장을 맡은 창간 후 1910년대까지의 『조선시보』는 조선에서 경영규모가 꽤 큰 신문 중 하나였다. 1910년 말 1일 평균 2,412부를 발행하고 있어, 부산의 경쟁지 『부산일보』의 2,400부보다 미량이지만 앞서고 있었다.⁹⁾ 당시 발행부수가 1일 1,000부가 넘는 신문은 18종의

8) 『九州日日新聞』 1894.11.25. ‘朝鮮時報發刊廣告’.

신문 가운데 6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조선시보』가 일본인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19년 4월 기존 합자회사이던 것을 25만 엔의 주식조직으로 바꾸면서 주소지 부산부 변천정 3정목 2번지에 사옥을 개축하고 사원을 늘리는 등 사세 확장을 꾀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다카키가 퇴사하면서 이듬해인 1920년 7월 잠시 휴간하였다. 곧 옛 간부들이 모여 자본금 2만 엔의 합자회사로 재간하였는데, 이때 사장은 가와시마 요시시게(川島喜彙), 사옥의 위치는 대청정 2정목 33번지였다.¹⁰⁾ 가와시마가 당시 부산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전차·전기부영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¹¹⁾ 신문사에서 나오자 1925년 이마카와 히로키치(今川廣吉)가 사장 및 주필 직을 승계하면서 서정 4정목 6번지로 이전하였다. 이후 꾸준히 증자하여 1925년 27,600엔, 1929년 5만 엔, 1931년에는 10만 엔에 이르렀다.¹²⁾

1926년 발간된 자료를 보면,¹³⁾ 9월 현재 『조선시보』는 발행지 부산을 넘어 경북, 경기, 전라, 강원, 평안, 함경도 등 조선 전역,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 이르기까지 구독망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당시 조선 내의 발행부수는 한 달 평균 6,268부였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야마구치, 관동주 및 ‘지나’ 기타 지역에도 200부 이상이 발행되었다.¹⁴⁾ 특히 부산 및 경남에서는 일본인 5,543부 못지않게 조선인에게도 419부의 구매력이 있어 주목된다. 지사·지국의 수도 점차 늘어나 1929년에는 경성, 인

9)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0, 656쪽.

10) 일본전보통신사, 『신문총람』, 1925, 324쪽.

11) 전성현, 「일제시기 부산의 전차 운영을 둘러싼 지역 운동과 힘의 역학관계」, 『석당논총』 65, 2016.

12) 일본전보통신사, 『신문총람』, 1932, 473쪽. 이후 폐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일본전보통신사, 『신문총람』, 1941, 335쪽).

13) 『朝鮮內發行新聞紙雜紙分布詳細一覽』, 1926.

14) 『朝鮮外發賣新聞紙部數調査表』, 1926.

천, 대구 등 주요 도시 뿐만 아니라, 원산, 구포, 삼랑진, 진주, 동래, 목지도, 함흥, 마산, 진해, 통영, 울산, 방어진, 밀양, 경주, 부산진, 하동, 여수, 김천, 포항, 삼천포, 상주, 신의주, 감포 등 일본인이 거주하는 중소도시, 나아가 도쿄, 오사카, 安東縣 등 해외에까지 총 29개소에 달했다.¹⁵⁾

『조선시보』는 대체로 6면의 신문으로써,¹⁶⁾ 정치·사회·경제·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발신하며, 오랜 연원에 걸쳐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보』도 일제 말 전시통제 정책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41년 조선총독부의 ‘一道一紙’ 정책으로 경상남도 마산의 『南鮮日報』와 함께 『부산일보』에 통폐합되면서 50년 역사의 이 독특한 미디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¹⁷⁾

Ⅲ. ‘지역언론’으로의 시작

창간 때부터 1910년대까지 『조선시보』는 조선에서 경영규모가 꽤 큰 신문 중 하나였다. 1910년 말 1일 평균 2,412부를 발행함으로써 경쟁 신문인 『부산일보』의 2,400부보다 미량이지만 앞서고 있었다.¹⁸⁾

우선 1910년대 『조선시보』의 지면구성을 살펴보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14년 11월 신문이며 조건 6면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지면에 정확한 ‘면수’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제호가 표시된 면을 1면으로 하고 그 외 지면은 면수불명

15) 일본전보통신사, 『신문총람』, 1929, 516쪽.

16)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을 가지고 보면 조선시보는 1914년 11월 6면에서 1919년 4면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936년 후반기(현존 자료는 11월)부터 6면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1941년 폐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신문총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일본전보통신사, 『신문총람』, 1917~1941).

17) 일본전보통신사, 『신문총람』, 1942, 161쪽.

18)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0, 656쪽.

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910년대 『조선시보』의 지면구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면	면수불명	면수불명	면수불명	면수불명	면수불명
사설 연재소설 <독자문예> <신간소설>	해외소식 일본정치상세 부산정치경제 <출입선박> <인사왕래> <여적>	부산사회사건 <독자란> 각 기관 공문 연예소식	연재소설 광고	<부산상보> <각지상보>	<일간경북판> (1914~1916) <지방판> (1917)

우선 1면 머리기사로는 <朝鮮時報>, <社說>, <言論>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이 주로 등장한다.¹⁹⁾ 그리고 그 밑으로 조선 내 전국 규모의 기사와 일본 내 정치 소식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1면의 5단 또는 6단에 연재소설이 배치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독자문예>, <신간소개>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면에서는 주로 해외소식과 일본 정치의 상세, 그리고 부산의 중요한 정치·경제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 매일 <출입선박>, <인사왕래>, <여적>이 8~9단에 배치되어 있다. 세 번째 면에서는 부산의 사회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당시 『조선시보』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부산일보』에는 없던 <독자란>이 6단 또는 7단에 설치되어 있다. 7단 또는 8단에는 <부산부공문>, <부산학교조합공문> 등의 각 기관 공문이나, 육관·보래관 등의 각 극장 공연프로그램이 게재되어 있다.

네 번째 면에는 1단에서 2단에 걸쳐 연재소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주로 광고가 있다. 다섯 번째 면에는 1단에 <부산상보>, 2단에 <각지상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 광고가 지면을 매우고

19) 1914~1917년까지는 <朝鮮時報>, 1918년부터는 <社說>의 명칭으로 사설을 게재하고 있다.

있다. 여섯 번째 면에서는 대구지사에서 발간한 <일간 경북판>이 추가 되어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가정란> (가끔 사회면에 게재), <경북판 독자란>, <문원> 등이 거의 항상 6~7단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1917년에는 <일간 경북판>이 사라지고 <지방판>이 등장하고 있으며, 1918년 이후가 되면 <지방판>을 지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²⁰⁾



『조선시보』 1914.11.5. <일간 경북판>



『조선시보』 1917.7.1. <지방판>

『조선시보』는 1910년대에 계속해서 조간 6면을 유지해 오다가 1920년 조간 4면으로 지면이 축소되었다. 이는 1919년 4월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는데 이 이후 지면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²¹⁾

1910년대에는 題號의 변화도 두드러진다(아래 <그림> 참조). 제호의 변화는 지면 구성의 변화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②번 제호로

20)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보』를 확인한 결과 1914년 11월 5일~1916년 8월 31일까지는 <일간 경북판>, 1917년 7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일간 경북판>을 대신하여 <지방판>이 삽입되어 있지만, 1918년 이후에는 모두 지면에서 사라졌다가 1936년 후반기부터 6면체제로 바뀌면서 다시 <지방판>이 게재되었다. 그런데 1936년 이후의 지방판은 물론 경상남북도의 기사가 제일 많지만 이전과 달리 전라도, 충청도 등 남부지방은 물론 경기도를 비롯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북부지방까지 아우르는 각 지역의 소식이 두루 실렸다. 따라서 1910년대의 지방판은 '부산의 지방판'이라면, 1930년대의 지방판은 '조선의 지방판'이라고 할 수 있다.

21) 『신문총람』 1920, 889쪽. 그러나 1919년도 신문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지면이 변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919년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있었고 1920년대에 지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주식회사로의 전환 이후 지면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바뀔 때 <일간 경북판>이 <지방판>으로 바뀌었고 ③번 제호로 바뀌었을 때 <지방판>이 없어지고 사설의 제목도 <朝鮮時報>에서 <社說>로 변화되었다. ④번 제호는 주식회사 전환 이후 지면 체제의 변화와 함께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14.11.2	1917.7.1	1918.2.11	1920.3.1	1921.3.1	1936.1.1	1936.11.2

[그림] 『조선시보』의 제호 변화

(현재 남아있는 신문에서 제호 변화가 나타난 날짜를 표시함)

1910년대 『조선시보』는 시기적 특성상 강제병합 이후 일제 식민통치 하의 조선의 변화된 모습, ‘번영’을 보여줌으로써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 그 주변 지역의 변화와 발전상을 주로 전하고 있다.²²⁾ 구체적으로, 경제면에서는 각

22)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1915년 9월분 전체 기사를 추출하여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국내						국외				합계
	전국	부산	경남	경북	기타	합계	중국	일본	기타	합계	
기사수	278	644	43	162	76	1203	34	148	112	294	1497
백분율	18.6	43	2.9	10.8	5	80.3	2.3	9.9	7.5	19.7	100

지역의 여러 경제 단체와 상업시설의 설치, 유력자본가의 동정, 조합 설립 기사가 눈에 많이 띄고 정치면에서는 일본의 소식을 제외하면 부협 의회, 학교조합 설립문제 등 식민 초기 정치·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기사들은 병합 이후 거류민단이 없어진 뒤 재부산일본인 사회의 정체성 재확립과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외신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그에 관한 소식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주로 일본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내용은 일본 정재계의 일반적인 소식이 많다. 1910년대에는 재조일본인들이 식민자로서 그들의 경제력, 정치력 등을 구축해 나가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 일본과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 정계나 경제 소식에 민감했고, 『조선시보』는 이러한 재조 일본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면과 2면에 집중적으로 일본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편, 1910년대 기사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²³⁾ 먼저 신문사가 사회를 보는 시선은 그 신문의 사설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시보』의 사설은 1면에 1건씩 <社說>, <朝鮮時報>, <言論> 등의 표기로 수록되어 있다. 사설의 내용은 주로 경제나 부산과 관련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1915년 9월의 총 26개 사설 가운데 경제에 관련된 사설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관련 사설이 2/3정도이다. 당시 사설은 ‘생산 흥업 연구’²⁴⁾ ‘상업가의 반성’²⁵⁾ ‘번영 중심의 이동’²⁶⁾ 등

23) 대략적인 추세만은 확인할 수 있도록 1915년 9월분 전체 기사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공시	기타	합계
기사수	26	540	486	302	26	104	13	0	1497
백분율	1.7	36.1	32.5	20.2	1.7	6.9	0.9	0	100

24) 『조선시보』 1915.9.2. ‘<言論>生産興業研究’.

25) 『조선시보』 1915.9.4. ‘<言論>商業家の反省’.

의 제목으로서, 조선 전체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개발의 시급성을 논하고 있으며, ‘부산진 시가 정리’²⁷⁾ ‘배수상의 설비’²⁸⁾ 등의 제목으로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 마련에 관해 지역 여론을 상기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1910년대 정치 관련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단연 1915년 9~10월에 있었던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이다. 조선총독부 주최로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되었던 공진회는 조선총독부 시정 5년간의 치적을 선전하는 정치적 행사였다. 따라서 5년간의 ‘발전상’을 보여주며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현란한 근대문명을 선전하며 일본 자본의 투자 유치 등이 주요한 목표였다. 신문은 공진회를 ‘조선 소개의 좋은 기회’²⁹⁾라고 하며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충실히 전달하였다. 각 지역의 공진회 관람단 모집 상황은 물론이고, 조선시보사, 부산일보사, 부산상업회의소, 부산부협찬회의 4단체가 주최가 되어 직접 공진회 관람단을 모집하는 광고를 신기도 하였다.³⁰⁾ 또한 공진회 관람뿐만 아니라 공진회 기간에 맞추어 개최되었던 전국기자대회, 조선철도천마일기념축하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 또는 일본단체 관광객들의 동향도 빠짐없이 전하면서³¹⁾ 이들에게 부산을, 더 나아가 조선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³²⁾

경제 관련 기사로는 우선 신항로 개설에 관한 『조선시보』의 입장이 눈에 띈다. ‘국가적 중요 항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하면서 시급

26) 『조선시보』 1915.9.7. ‘繁榮中心の移動’.

27) 『조선시보』 1915.9.5. ‘<言論>釜山鎮市街整理’.

28) 『조선시보』 1915.9.10. ‘排水上の設備’.

29) 『조선시보』 1915.9.16. ‘<言論>朝鮮紹介の好機’.

30) 『조선시보』 1915.9.12. ‘共進會觀覽團員募集’.

31) 『조선시보』 1915.9.21. ‘記者團歡迎の辭’.

32) 『조선시보』 1915.9.18. ‘<言論>如何に紹介すべき’. 『조선시보』 1915.9.20. ‘<言論>社交活動の機’. 『조선시보』 1915.9.23. ‘釜山の紹介を望む’.

히 동해를 횡단하는 신항로를 개시하여 동일본-연해주-북산지방을 연결하는 삼각항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또한 이를 대비하여 부산의 항만설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³⁴⁾ 조선의 유망한 사업에 관해서도 꽤 오랜 시간동안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³⁵⁾ 어느 신문이든지 정치관련 기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경제가 그 뒤를 잇고 있지만, 1910년대 『조선시보』는 정치와 경제 기사가 기사 수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선시보』의 모태였던 『부산상황』이 부산의 경제소식을 보도할 목적으로 창간되었고, 이후 『동아무역신문』으로 신문명을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 전문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발간했기 때문에 경제 기사가 다른 신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다양했다.

사회면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기사가 게재되는 가운데 특히 풍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경남 낙동강 주변 지역들의 피해 규모 및 피해 복구 소식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³⁶⁾ 조선시보사는 직접 피해지역으로 특파원을 파견하여 취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신문보다 빨리 상황 보도를 할 수 있다.³⁷⁾ 사회면의 <讀者欄>에서는 신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기사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신문의 오타를 수정해 주는 등의 내용에 관한 건의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고발 등도 종종 수록되어 있다. <독자란>을 통해 신문의 수용자에 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선시보』만의 장점이다.

33) 『조선시보』 1915.9.11. '國家的重要航路'.

34) 『조선시보』 1915.9.23. '釜山港灣設備概要'.

35) 『조선시보』 1915.9.4. '朝鮮水産界の新しき試み'. 『조선시보』 1915.9.5. '有望なる朝鮮の果樹栽培'. 『조선시보』 1915.9.5. '朝鮮の農事經營'. 『조선시보』 1915.9.8. '朝鮮の棉花栽培業'. 1915.9.17. '植民と朝鮮農業'.

36) 『조선시보』 1915.9.14. '<言論>水害戦後の處置'.

37) 『조선시보』 1915.9.20. '沿線水害狀況視察(4) 特派員 熊谷紫浪'.



『조선시보』 1915.9.24. <讀者欄>

그러나 1910년대의 『조선시보』의 사세는 아직 영남권을 크게 벗어 나지 않았다. 주로 총독부 소식을 전하는 전국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영남권 소식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간 경북판>, <지방판>을 만들어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려 하고 지사지국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1910년대 말이 되면 <지방판>이 지면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에 1910년대 『조선시보』는 발행지 부산과 부산 주변 지역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V. 식민지 ‘전조선언론’으로의 도약

1920년대 전반 『조선시보』는 조간에서 석간발행으로 바뀌었으나, 그 지면은 1919년 6면에서 4면으로 축소된 이래 내내 4면 체제를 유지하였다. 지면구성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1면 머리기사로는 <言論>, <論說>, <時報評論>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설을 싣고 있다. 그 아래 국제와 국내 정치 기사, 주요 인물 인터뷰 등 메인 뉴스를 배치하였으며, <短歌>, <時報俳壇>, <時報詩林>, <新刊紹介> 등의 고정 코너와 함께 연재소설

이 게재되었다. 하단에는 광고가 자리한다.

이어서 2면 상단에는 <동경전보> 등을 통해 본국의 정계 동향과 사회적 이슈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 아래 부산과 경남을 비롯한 조선 내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다룬다. 3면 역시 같은 패턴의 전국적 수준의 뉴스와 지역소식이 이어지는데, 2면과 3면의 차이점이라면 전자가 주로 상업회의소나 관공서의 동향 등 정·재계 유력자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반해, 후자는 사회·문화 부문의 정보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2면 하단에는 <인사소식>과 함께 <餘語>, <餘滴>, <小春秋> 등의 이름으로 짧은 비평에 이어, <商況>, <登記公告>, <敍任及辭命>, 광고 등이 자리한다. 3면 하단에는 <연예>, <일기예보>, <독자의 소리>, <사고>, <부산부공문>, <학교조합공문>, 광고 등이 배치된다. 이어서 4면은 연재소설과 <연예안내>, 광고로 구성된다.

1면	2면	3면	4면
사설 메인 뉴스 <단가> <시보배단> <시보시람> <신간소식> 연재소설 광고	<동경전보> 정치·경제 뉴스 <인사소식> <여어> <여적> <소춘추> <상황> <등기공고> <서임급사령> 광고	사회·문화 뉴스 <연예> <일기예보> <독자의 소리> <사고> <부산부공문> <학교조합공문> 광고	연재소설 <연예안내> 광고

1920년대 『조선시보』는 1910년대와 1930년대에 비해 해외 관련 기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일본과 조선, 특히 부산에 관한 기사량이 크게 늘어난다.³⁸⁾ 이는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1931년 만주사변 발발 때까지 일본의 대륙팽창정책이 잠시 휴지상

38) 대략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1921년 4월분 전체 기사를 통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태에 있었고, 조선총독부와 재조일본인의 입장에서는 3.1운동에 따라 안정적인 식민지 통치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920년대 일본은 국내에서는 정당정치, 대외정책에서는 국제협조주의가 강조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기사의 내용도 정치와 사회, 문화 관련 기사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고른 기사분포 경향을 보인다. 즉, 1920년대의 『조선시보』는 여전히 본국과 발행지인 부산 소식 위주이기는 하지만, 타 시기에 비해 조선 내 각 지역의 분야별 주요 현안들을 상세히 수록하여 단순히 지역언론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현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흔히 ‘문화정치’기라고 일컫는 1920년대의 『조선시보』 지면은 부산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강점 후 조선인사회와 분리된 재조일본인사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던 1910년대와 달리, 한반도 북부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 조선인 독립운동, 조선인 참정권문제, 전차 전기 府營문제 등 민족과 계층을 초월한 굵직굵직한 화제들을 쏟아낸다.

우선 1920년대 초에는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 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1921년 4월은 3.1운동으로 촉발된 조선인의 조선총독부 시정에 대한 불만을 희석시키고자 신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부임 이래 최대의 시정선전캠페인이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중앙관료와 지방 관료가 총출동하여 집중적으로 행했는데, 시정에 대한 해명은 물론 간담회 형식을 통해 미약하나마 조선인들의 불만을 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관하여 전국적 상황을 보도하는 일환으로 부산에서의 일정만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매일신보』에 반해³⁹⁾

	국내					국외				합계
	전국	부산	지방	기타	합계	중국	일본	기타	합계	
기사수	162	498	192	162	1014	12	126	18	156	1170
백분율	13.8	42.6	16.4	13.8	86.7	1.0	10.8	1.5	13.3	100

『조선시보』는 조선인의 목소리를 거의 여과 없이 게재할 정도로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한다. 즉 강연회에 참석한 조선인 유지 김준석은 “차별대우철폐는 모두 하나의 구실로써, 실제 도처에서 심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으며 그 예를 일일이 들어 설명하였다. 이어서 김종범은 교통통신기관의 발달, 언론집회 등의 일부 허용 외에는 “전 데라우치 총독정치보다 심히 불철저하며 성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선정이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문화정치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 기사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게재되며,⁴⁰⁾ 관련 기사들도 다수 보인다.

조선인 민족운동·독립운동에 관한 기사들도 자주 실린다. 특히 국내 최초의 무정부주의 단체인 ‘黑濤會’를 조직하여 1923년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裕仁)를 암살하려 한 ‘大逆事件’의 주인공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소식은 그 사안의 휘발성 때문에 연일 대서특필되어 당대 재조일본인사회의 위기감을 실감케 한다.⁴¹⁾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불만한 조선인사회의 동향들도 종종 보도되는데, 지역 사정에 대한 상세한 보도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1921년 4월 경남 사천에서 ‘假政府의 소사’를 자칭하는 2명의 도둑이 현금을 강탈해갔다.⁴²⁾ 하동에서도 역시 가정부원이 군자금과 여비를 강요하다가 체포되었고,⁴³⁾ 진주에서는 ‘大同新報’라는 ‘불온문서’를 배포하다가 체포되는 등 크고 작은 기사들이 즐비하다.⁴⁴⁾ 『조선시보』는

39) 『매일신보』 1921.4.18. ‘釜山方面宣傳’.

40) 『조선시보』 1921.4.22. 23-24-26. ‘施政宣傳講演會席上に於ける澤田監察官對金鐘範氏外數氏鮮人有志の質問’. 23일 지면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41) 『조선시보』 1926.3.28. ‘<時報論壇>朴烈文子兩名減刑’. 『조선시보』 1926.9.20.(2), ‘朴烈等の優遇問題益々紛糾, 大逆朴烈に文子を假監で同室?’.

42) 『조선시보』 1920.4.20. ‘假政府の小使, 出きねば放火’.

43) 『조선시보』 1920.4.20. ‘假政府員を種に千圓の無心を吹かく’.

44) 『조선시보』 1920.4.20. ‘不穩文書犯逮捕’.

이들을 한 지면의 7·8·9단에 연이어 보도할 만큼 조선인사회의 동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같은 시기의 다른 신문 어느 지면에 서도 해당 사건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인 참정권 문제도 1920년대의 화두인데, 『조선시보』에는 국민협회 이동우의 글이 1926년 2월 시리즈로 게재되고 있다.⁴⁵⁾ 이 글에서 그는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 사장 소에지마 미치마사(副島道正)의 ‘조선자치론’을 반박하고, 제국의회에 대한 조선인 참정권을 요구한다. 이는 당시 일제의 통치기조 ‘내지연장주의’를 조선에서 실현해 달라는 것으로, 재조일본인들의 매체 『조선시보』가 총독부와 본국이 얽힌 이 문제를 현지 민간식민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테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1920년대 지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전차 전기 부영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시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소수의 재벌과 그들을 옹호하는 경쟁지 『부산일보』와 달리 ‘府民’의 여론, 즉 ‘공론’을 들어 적극적으로 부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이는 일본인사회 내의 계층적 분열과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부민의 절대다수인 조선인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시보』는 조선인들을 그저 공론임을 내세우기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통치의 안정을 위해 식민지에서의 내지연장을 지지할 뿐, 자신들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안보를 조선인들로부터 굳건히 지키고자 하였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선인들의 사소한 불온한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해가정부(상해임시정부)와의 연결을 의심하거나 농촌사회의 좌경화에 대해 우려를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45) 『조선시보』 1926.2.10. ‘<奇書> 副島伯呈朝鮮統治根本方針論(1) 國民協會 總務 李東雨’.

46) 『조선시보』 1926.9.15. ‘<時報評論> 電氣問題高潮(1) 日報의愚論을駁撃す’.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도 강고하여, 조선인 여학생이 음탕하고 “요즘은 처녀가 드물다”는 등 모욕적 기사를 실기도 했다.⁴⁷⁾ 이는 조선인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문화정치’와 ‘내지연장주의’가 강조되던 시점에도 지속되었던 재조일본인사회의 폐쇄적 민족정체성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V. ‘제국언론’으로의 확장

석간 4면으로 발행되던 1930년대 『조선시보』는 1936년 11월 이후 6면으로 증면되었다.⁴⁸⁾ 지사·지국의 전국적인 확대와 함께 발행지를 부산을 넘어 경북, 경기, 전라, 강원, 평안, 함경도 등 조선 전역과 관동주 등 중국과 만주로까지 확대한 1930년대 『조선시보』 그 이전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취재한 다양한 소식을 기사로 실고 있다. 지면 구성을 6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사설 해외소식 일본정치 부산정치경제 광고면	<시사평단> 해외소식 일본정치 부산정치경제 <연락선상륙객> <소춘추>	<지방판>	<가정과 부인> <소년페이지>	경제소식 물가동향 선박출입 광고	소설 광고면

47) 『조선시보』 1925.9.6. ‘鮮人女學生の墮落は享樂氣分に胚胎か環境に罪を嫁するのは酷’.

48)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보』를 확인한 결과 1936년 6월과 11월 사이에 지면 변화가 확인되는데, 그 사이의 신문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 신문총람에 의하면 1936년에는 4면, 1937년에는 6면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1936년 후반기에 6면 체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일본전보통신사, 『신문총람』, 1936-1937, 473-489쪽).

1면은 사설과 국제정세 및 일본 본국의 소식, 그리고 조선 내 전국 규모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고, 2면에서는 이에 더해서 논평과 부산지역의 소식들이 실렸다. 3면은 『조선시보』의 <지방판>으로 발행되었다. 4면은 <가정과 부인>, <소년페이지> 등의 제호 하에 각종 생활단신과 문화계 소식, 소설 등이 실렸고, 일부는 <진주판>으로 발행되었다. 5면은 경제소식, 특히 부산지역의 경제관련 기사로 채워져 있으며, 주가와 각종 물품의 거래상장 등 <經濟市況>이 하단에 수록되어 있다. 6면은 소설과 광고면으로 구성되었다.

1930년대 『조선시보』는 지사 지국의 확대와 함께 국내 기사 외에 다양한 지역의 소식을 보도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 시기에 비해 외신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인데, 특히 중국 관련 기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⁴⁹⁾ 이는 부분적으로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선시보사가 국경을 넘어 중국, 만주 등지로까지 사세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그 현장의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동맹’ 관계에 있는 현지 정보(‘○월○일발 ○○동맹’)를 전신으로 받아 신속하게 기사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기사 가운데에는 지방의 소식을 다룬 기사의 비중이 전체 기사 수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 『조선시보』가 부산을 거점으로 발행된 지방신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특이한 수치다. 이는 1936년 하반기부터 4면에서 6면으로 지면 수를 늘여 발행하면서 3면을 <지방판>으로 발행해 각 지역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

49) 1930년대 기사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1937년 8월분 전체 기사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국외				합계
	전국	부산	지방	기타	합계	중국	일본	기타	합계	
기사수	280	364	854	210	1,708	392	175	77	644	2,352
백분율	11.9	15.5	36.3	8.9	72.6	16.7	7.4	3.3	27.4	100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관>의 기사는 경상남북도 지역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전라도, 충청도 등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북부지방까지 아우르는 각 지역의 소식이 두루 실려 있다.⁵⁰⁾ 여기에는 각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과 사건사고, 논평, 유력인사의 동정, 광고 등이 실려 있다. 별도로 <진주관>이 설정되어 진주지역의 소식은 더욱 심



1937.8.3. 『조선시보』지방관

도 있게 보도되었고, <통영안내> <진주안내> <삼천포안내> 등의 코너가 마련되면서 해당 지역 상가의 동향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들 <지방관>에는 중앙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소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도 『조선시보』를 통해 훨씬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1930년대 『조선시보』의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1930년대라는 시기적 특성상 기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전쟁을 바라보던 지역민들의 시각이나 그들의 '일상'에 대한 단편적인 기사를 통해 전정기 지역민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50) 마찬가지로 1937년 8월분 전체 기사 중 국내 기사를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	경남	경북	전라	충청	경기	황해	평안	함경	합계
기사수	479	63	93	22	90	37	23	47	854

지 그 구체적인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방에서의 지원활동과 관련해서도 상당수의 기사를 찾을 수 있는데, 거의 매일 게재된 인원 모집광고나 모금광고, 선전물 등은 일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동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례를 제공해 준다.⁵¹⁾ 한편 도회, 부·군·면협의회, 학교비평의회 등 자치기관의 활동과 지방정치에 참여하였던 일본인과 조선인 유력 인사들의 동정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 ‘통제경제’ 영향 아래에 있던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주요 기업의 운영실태도 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보』의 논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설은 1면의 <사설>과 2면의 <시보평단> 코너로 1일 1~2건의 기사로 보도되었다. 사설은 정치관련 사설이 가장 많았고, 경제관련 사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정치관련 사설은 대부분 중일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황에 대한 평가나 시국인식, 전시 동원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조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관련 사설은 중일전쟁기 조선과 만주, 중국과 관련된 교통 등의 각종 경제문제와 전시체제 하에서의 물가폭등, 이를 이용한 부정상인에 대한 단속에 관한 내용이 많다.⁵²⁾

정치 관련 기사 가운데에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관한 기사가 단

51) 1930년대 이후 (준)전시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수탈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의 영향 아래에 전시수탈의 강화와 황민화정책의 실상 폭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던 한편 전시경제개발에 의한 ‘식민지근대화’ 양상은 한국자본주의의 성장 기반으로 미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일제 지배정책의 본질과 ‘식민지 근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시각과 소재를 다변화하는 가운데 개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에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참고.

52) 사설의 분야별 비중은 전체 기사의 분야별 비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1930년대 전체 기사의 분야별 예시로 1937년 8월분 전체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공시	기타	합계
기사수	52	1,214	497	327	48	123	21	70	2,352
백분율	2.2	51.6	21.1	13.9	2.1	5.2	0.9	3	100

연 으뜸이다. 『조선시보』는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대륙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경과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호외로써 알렸다. 또한 지역에서의 전쟁협조와 관련하여 시국인식을 강조한 유력 인사들의 강연회 개최 기사나 군대지원, 애국헌금납부, 비행기 헌납, 군인의 집을 방문하여 위문한 내용 등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참전 군인의 구체적인



1931.9.23. 『조선시보』호외

인 명단이나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는 반복기사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농촌진흥운동이나 복선개발, 어유비(漁油肥) 통제 등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주요 정책이나 부회나 도회의 정기·부정기적 활동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중앙지를 통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지방 읍·면협의회 관련 기사가 많은데, 여타 중앙지에 보도된 관련 기사가 회의가 열린 날짜와 장소, 주요안건 정도로 간략하게 보도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보도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1930년대 읍·면협의회에는 특히 조선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던 만큼 이 시기 지방정치를 매개로 한 지역 내에서의 권력관계나 조선인들의 동향을 『조선시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⁵³⁾ 이 외에 제주도 해녀항쟁,⁵⁴⁾ 반전빼라 살포⁵⁵⁾와 같은 항일운동 기사도 단편적으로 보인다.

53) 1920~1930년대 부·면협의회와 관련해서 일제 식민지 당국은 조선인의 정치참여 확대라든가 지방자치의 초석이라고 선전하였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당국의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는 인식 하에 그것이 식민지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역적 편차가 커서 지역별 사례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홍순권, 「1920~1930년대 동래의 지방선거와 조선인 당선자들」,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437~475 참조.

『조선시보』1937.8.13.	『동아일보』1937.10.9.	『매일신보』1937.9.5.

[그림] 신문사별 읍면장회의 관련 기사 비교

경제 관련 기사를 통해서도 통제경제 하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기업들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경제 관련 기사로는 (준)전시체제가 물가폭등과 부정 상인 단속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1930년대 조선총독부 경제정책의 중심이었던 통제경제와 관련된 기사가 많다. 화학공장의 진남포 설립,⁵⁶⁾ 경동철도 부설을 둘러싼 지역의 동향,⁵⁷⁾ 강계수력전기회사 허가,⁵⁸⁾ 청진의 제철소 신설,⁵⁹⁾ 서선중앙철도회사 설립,⁶⁰⁾ 압록강 수전회사 시설⁶¹⁾ 등 1930년대 북부지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평양이나 함경 등 북부지방에서의 기업활동에 관한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

사회 관련 기사는 <지방판>을 통해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후방에서 일본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 내 각 사회단체 및 지부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기사는 중앙지에 비해 훨씬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 사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각종 사건·사고 기사와 함께 중일전쟁 발

54) 『조선시보』 1931.2.3. ‘全南の回答なきを斷然改正案を實施す’.

55) 『조선시보』 1932.1.14. ‘反戰ピラ事件 益々擴大の模様’.

56) 『조선시보』 1937.8.2. ‘日本化學工業’.

57) 『조선시보』 1937.8.10. ‘京東鐵道の新線認可で關係地方に一大光明’.

58) 『조선시보』 1937.8.10. ‘江界水電許可’.

59) 『조선시보』 1937.8.10. ‘清津の日鐵製鐵所新設’.

60) 『조선시보』 1937.8.11. ‘無煙炭田を貫く西鮮中央鐵道計劃’.

61) 『조선시보』 1939.4.18. ‘鴨江水電埋設地’.

발 이후 전국적으로 조직된 조선군사후원연맹, 대일본국방부인회, 애국소년단, 청년단, 경우회(警友會) 등 지역 내 각 사회단체 및 지부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개괄적 연구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운영되고 있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보』는 <지방판>의 지면을 빌려 이러한 단체의 설립과정이나 규약, 선언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⁶²⁾ 이 외에 1930년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쟁의·파업 기사도 확인되며, 콜레라와 이질 등의 전염병 발병과 방역에 관한 기사 등도 사회면을 채우고 있다.

문화 관련 기사로는 조선신궁 참배, 스모 관람, 영화계 소식 등이 있고, <교육> 관련 기사로는 동본원사 부산유치원으로의 기부와 울산공업농업학교 지진제, 교원시험 등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1930년대 『조선시보』는 조선 전역은 물론 국경을 넘어 일본과 중국 등으로 확대된 광범위한 지사·지국망과 동맹 관계의 현지 통신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중국과 만주 등지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준)전시 상황을 기사화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확대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조선총독부의 통제정책도 신속하게 전달하였다. 1930년대에는 특히 지방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그 독자층을 한층 두텁게 했는데, 후방에서 실천되고 있던 다양한 '선행'을 보도하면서 『조선시보』 독자들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문장보국(文章報國)' 하겠다 한

62) 예컨대 충북군사후원연맹(1937.8.3), 군산군사후원연맹(1937.8.8), 통영군사후원연맹(1937.8.13), 조선인이 조직한 총후지성회(統後至誠會) 지부(1937.8.24)의 조직 기사 등 중앙지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혹은 『조선시보』에 더 상세하게 보도된 기사, 「군사후원연맹순방기」(1937.8.30) 등의 연재기사는 『조선시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제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시보』의 창간과정과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각 시기별 지면 구성과 그 게재된 기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보』는 애초 부산의 일본인사회를 대변하는 지역 상업신문으로 성립되었지만 조선이 식민지화되고 식민지체제가 심화되자 식민지 전조선의 신문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1929년 지사지국망을 보면 이미 조선 전역에 지사지국이 설치되었고 일부 일본과 만주 쪽에도 지사지국이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1931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치는 전시체제가 되자 이와 관련한 기사의 발신과 함께 제국언론으로 확장하고자 노력했다. 자료의 한계이지만 신문지사·지국의 중국, 만주 쪽으로 확장과 함께 현지 통신사와의 동맹을 통해 현지 생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이를 통한 지면 구성도 확대하여 제국과 식민지 전체를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 『조선시보』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사회를 대변하는 신문이었는데 지역의 식민자의 입장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역주의를 넘나 들었다. 즉 『조선시보』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입장에서 조선총독부를 대변하기도 했으나, 지역주의의 입장에서 총독정치의 미흡한 점을 짚거나 성토했기도 하고 본국의 정당정치와 식민정책에 대한 과감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1922년 한 조사에 의하면,⁶³⁾ 『조선시보』는 본국의 정당과 ‘무관’하며 조선총독부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不離不

63) 『일본신문연감』, 日本新聞研究所, 1922, 123~124쪽.

郎', 즉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중립적 성격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셋째, 다른 지역신문인 『부산일보』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지역, 특히 부산의 입장에서 상세히 보도한 신문이었다. 보도의 양을 보면 훨씬 더 큰 신문인 『부산일보』가 『조선시보』보다 많았지만, 보도의 질을 보면 1910년대와 1920년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도청이전문제, 수산공진회 연기문제, 전차·전기부영문제 등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민의 입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보도한 신문이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문이기에 중앙지가 다루지 않는 지역의 상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탁월하다. 또한 피식민자 층의 동향에도 매우 촉각이 예민하여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조선인사회에 대해서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 당대 주요 한글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완하거나 누락된 화제를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넷째, 주로 중·소자본가계층 등 중산층 이하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한 신문이었다. 일문 민간지라도 『조선시보』는 다소 특징적인 사론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인사회를 이끈 것은 최상층의 소수 유지들이므로, 지역 현안을 다루는 이들 언론의 사론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쟁지 『부산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일문신문이 그랬다. 이에 비해 『조선시보』는 '부민의 여론'과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회 상층은 물론 중산층 이하의 여론까지 대변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부민', '여론', '공공성'에는 사회 하층의 절대 다수인 조선인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들의 '여론'과 '공론'에 조선인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동원했지만 일상에서는 차별과 배제라는 식민자의 시선으로 일관했다.

다섯째, 그렇기에 중앙지에 비해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모욕적 기사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 신문은 지역 내에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중앙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모욕적 기사를 더 많이

게재했는데, 『조선시보』 역시 그랬다. 이상과 같이 식민성, 지역성, 계층성, 민족성이 한데 얽혀 복잡하고 독특한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언론이 『조선시보』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 『朝鮮時報』, 『釜山日報』, 『九州日日新聞』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日本電報通信社, 『新聞總覽』, 1917~1941.
日本新聞研究所, 『日本新聞年鑑』, 1922.
『朝鮮內發行新聞紙雜紙分布詳細一覽』, 1926.
『朝鮮外發賣新聞紙部數調査表』, 1926.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미즈노 나오키,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일본어 신문」, 『역사문제연구』18, 2007.
홍순권, 「1920~1930년대 동래의 지방선거와 조선인 당선자들」, 『근대도시와 지방 권력』, 선인, 2010.
홍순권·전성현 엮음, 『일제시기 일본인의 부산일보 경영』, 세종출판사, 2013.
전성현, 「일제시기 부산의 전차 운영을 둘러싼 지역 운동과 힘의 역학관계」, 『석당 논총』 65, 2016.
- 이상철, 『朝鮮における日本人經營新聞の歴史』, 角川學藝出版, 2009.
김태현, 「朝鮮における在留日本人社會と日本人經營新聞」, 神戸大 博士論文, 2011.

투고일 : 2018. 06. 11. 심사완료일 : 2018. 07. 05. 게재확정일 : 2018. 07. 18.

| Abstract |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Chosenjiho*』 through the Newspaper System and Content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Jeon, Sung-Hyun·Lee, Ga-Yeon·Bae, Byoung-Wook·Ha, Ji-Young

The 『*Chosenjiho*』, which was founded in the early days by the Japanese who came to Busan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was originally established as a regional commercial newspaper representing the Japanese society in Busan. When Chosun became a colony and the colonial system deepened, the 『*Chosenjiho*』 tried to escape from the local newspaper. In other words, the proportion of articles covering the whole empire and colony as well as the expansion of newspaper offices and branches has increased. This trend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change of the newspaper system from 1914 to 1941 and the contents of the paper.

The Japanese local newspaper 『*Chosenjiho*』 of colonial Chosun has some characteristics. First, it represented the position of the Chosun governor general as a private newspaper. However, it did not hesitate to criticize the governor-general politics and Japanese party politics as well as colonial policy. Secondly, it reported more about the area than the other local newspaper 『*Fusannippo*』, and it was a newspaper that could fill the gap. Especially, from the aspect of the colonizer, it tried to represent not only the society upper class but also the public opinion below the middle class with 'public opinion' and 'publicness'.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olonized, it published an article on the details or missing parts of the Chosun people society than reported in major hangul newspapers of the day.

However, there was no place for Chosun people, who are the majority of the under-society in the ‘Bumin(府民)’, ‘public opinion’, and ‘Publicness’. Although the "public opinion" included Chosun people, it was consistent with the gaze of colonizer such as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everyday life. Therefore, there were relatively many discriminatory and insulting articles about Chosun people compared to the central newspaper. As mentioned above, 『*Chosenjiho*』 was a Japanese media of complicated and unique colonial Chosun, which was intertwined with coloniality, locality, hierarchicality and ethnicity.

Key words: *Chosenjiho*, *Fusannippo*, local newspaper, colony newspaper, empire newspaper, colonizer, Japanese society